



2021. 06. 24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21호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1. 6. 24

Vol. 21

ISSN	2733-8258
발행일	2021년 6월 24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박성원**

요약

I. 전환의 시그널

II. 한국사회의 갈등과 대립 양상

- 국가성장과 개인성장

-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 효율성과 형평성

III.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와 전망

IV. 우직지계(迂直之計)의 가능성

참고문헌

- 우리사회의 갈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사회가 어디에 있으며, 국민은 어느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지 탐색해보았다. 우리사회는 국가성장과 개인성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대립하고 갈등해왔다. 역대 정부마다 이 대립과 갈등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하다.
- 미래, 발전, 성장을 주제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최근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래 공간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이 미래 공간은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이자 중간 기착지로 해석할 수 있다. 선호미래로 가는 가파른 지름길보다 완만한 우회로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려고 한다.

I. 전환의 시그널

사회심리학자 박진영은 일을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좌절이 늘어갈 때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한다.¹⁾ 좌절이 늘어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선택하지 못하는 행동은 실제의 문제를 마주하면서 환상이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미래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각종 설문조사의 최근 내용을 분석해보면 우리사회는 갈팡질팡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몇 개의 사례를 들어보자. 2020년에 국민은 향후 10년간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국가목표 1순위로 ‘고도의 경제성장’(55.5%)을 꼽았다(한국행정연구원, 2020). ‘도시 및 농촌의 환경보호’는 4순위(8.8%), 꼴찌로 꼽혔다.

같은 해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상반된 국민의 마음이 읽혀진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4.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10.9%에 그쳤다(민보경 외, 2020).

규범적 선택을 해야 하는 환경문제이어서 이런 응답률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조사 결과를 보자. ‘소득이 적고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와 ‘다소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싶다’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국민의 45.3%는 전자를 택했다. 후자를 택한 국민은 28.5%였다(한국행정학회 대한민국 미래100년 특별위원회, 2021). 돈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몸과 영혼을 갈아넣었던 우리사회 시민들의 마음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할까.

국민의 미래 인식을 조사한 최근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제성장보다는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민에게 어떤 질문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어떻게 물어보든 국민의 마음은 예전처럼 일관되게 고도의 경제성장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듯 혼재된 국민의 생각은 우리사회가 마주한 복잡한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저성장의 흐름, 이런 흐름을 가속화하는 저출생 고령화의 심화,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은 기존의 국가 비전에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 박진영. (2019년12월28일자). 갈팡질팡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동아사이언스.

실제, 프랑스 하원이 최근 헌법 제1조에 “국가는 생물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찬성 391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헌법은 한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담은 것으로 프랑스는 국가의 비전에 일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전의 전환은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프랑스 하원은 정부가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²⁾

우리사회는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관성대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면 환경 보존의 목소리와 요구가 거세지고, 환경보존을 목표로 주요 정책의 흐름을 바꾸면 경제성장이 멈출 것 같은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성장하면 개인도 성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세대간, 계층간 격차의 심화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는 이런 불평등을 복지와 과학기술로 풀어낼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대안의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국민의 마음도 방향성을 잃고 갈팡질팡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최근 3년 동안 발표된 미래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가 어떤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갈등을 있는 그대로 오롯이 드러내면서 우리가 어떤 누적된 갈등을 겪고 있는지, 갈등이 완화되는 새로운 미래공간의 창조는 가능한 것인지, 그 미래로 가는 방향에서 어떤 대안적 길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한국사회의 갈등과 대립 양상

2.1. 국가성장과 개인성장

국민에게 국가의 주요 목표를 물어보면 대부분 경제성장이라고 답한다. 민보경 외(2020)의 조사에서 ‘경제성장이 국가의 목표와 업무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본 결과, 85.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프레임이 읽힌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0년에 펴낸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향후 10년 간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국가 목표 1순위로 ‘고도의 경제성장’이 꼽혔다. 또 다른 국가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응답자들은 ‘물가인상 억제와 경제 안정’을 꼽았다. ‘더욱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이나

2) 허경주. (2021년5월5일자). 프랑스 하원 기후법 통과...“기차로 2시간30분 거리 항공기 못 띄운다”. 한국일보

‘돈보다는 아이디어나 이상이 중요시되는 사회로의 발전’을 꼽은 국민은 소수였다.

국가의 역할에서 경제적 성장은 국가의 성장이고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 개개인도 성장한다는 명제는 오랫동안 우리사회에 자리잡았다. 김석호 외(2021)는 ‘경제가 성장하면 모두가 부유해질 것이다’라는 진술문과 ‘경제가 성장해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는 진술문을 대립시켜 놓고 국민의 선택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58.9%는 전자를 선택했다. 국가가 성장해야 개인도 성장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은 복지분야에서 대립되는 진술문의 선택에서도 확인된다. ‘최대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진술문과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에만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진술문에 대해 국민의 61.5%는 후자를 선택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개인별 성장의 격차 또는 불평등을 우리나라 국민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성장이 곧 개인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만 있는 것일까. 한국행정학회 대한민국 미래100년 특별위원회(이하 한국행정학회) 조사(2021)에서는 국가주의 성장담론에서 벗어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조사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 ‘탈성장 사회나 대안사회’ ‘과학기술 중심사회’ 등으로 미래상을 정의하고 국민에게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물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는 빈부의 격차를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작은 정부와 규제의 최소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는 사회를 말한다. 반면, 탈성장 사회는 국가주의 경제성장보다는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를 중시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 소규모 지역공동체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사회다. 과학기술 중심사회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고, 기술로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며, 현실보다 가상현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를 말한다.

앞서 거론한 조사결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과반 이상이 택했을 것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47.7%였고, 탈성장 사회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32.2%였다.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20.1%였다. 다수의견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었지만, 2순위로 과학기술사회가 아닌 탈성장이 꼽혔다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표 1> 30년 후 희망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의 선택

	지속적인 경제성장사회	탈성장 사회나 대안사회	과학기술 중심사회
2021년 (1,000명)	47.7%	32.2%	20.1%
2014년 (1,206명)	47.8%	36.2%	16.0%

(출처: 한국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14)

이 조사는 2014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었는데, 그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47.8%였고, 탈성장 사회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36.2%였다(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14).³⁾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탈성장을 바라는 응답자는 30% 이상이어서 이 미래를 지지하는 그룹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국가의 성장보다는 개인의 성장, 경제적 성장보다는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를 추구하는 탈성장 사회는 누가 지지했을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20대가, 이념성향으로는 진보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는 301만원~500만원 이하에서, 직업으로는 화이트칼라나 학생이, 학력으로는 대학재학 이상에서 이 미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성장보다 개인의 성장이 앞으로 더 중요한 가치로 추구될 수 있을까. 국회미래연구원의 박성원(2020)은 국민이 선택한 선호미래를 분석한 결과, ‘개개인의 미래기획과 추진을 돕는 공동체의 등장’을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 기존의 방식대로 국가나 공동체의 성장에 개개인이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개개인의 성장에 국가나 공동체가 기여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선호미래 공론조사(박성원 외, 2019)에서 국민은 도전과 변화를 지향하면서도 분배와 협력을 중시하는 ‘도전분배사회’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론조사에서 이 미래를 지지한 시민들은 발전과 포용, 미래세대와 자연과의 공존, 혈연이 아니라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계층간의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미래를 원한다고 말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자 한 20대 여성은 도전분배사회를 지지하는 이유로 “저출산 시대에 가정에서 많은 자녀를 낳지 않는 현실에 외동인 자녀들이 많다”며 “미래에는 서로 도와가며 꼭 혈연이 아니라도 가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성원 외, 2019:57). 저출생 시대에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성장을 바라는 국민은 그 성장이 꼭 경제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득이 적고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와 ‘다소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싶다’는 대립항에서 응답자의 45.3%는 전자를 선택했다(한국행정학회, 2021). 후자를 택한 응답자는 28.5%에 불과했다.

3) 2014년 실시된 이 조사는 2가지 버전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6명을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을 때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사회(47.8%), 탈성장 사회나 대안사회(36.2%), 과학기술중심사회(16%)로 나타났다. 그런데, 표본크기를 2,022명으로 확대하고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을 70:30(실제 58:42) 비율로 배정한 뒤 이메일을 이용한 웹조사에서는 탈성장사회나 대안사회(52.4%), 지속적인 경제성장사회(35.4%), 과학기술 중심사회(12.2%) 순으로 나타났다. 30년 후의 희망하는 한국사회를 묻다보니 그 시대에 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의 표본을 과대표집한 것이었고, 그 결과는 탈성장사회나 대안사회가 희망의 1순위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2.2.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우리사회에서 가장 극심하게 대립하는 가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21년에 국민 2,000명을 조사하면서 ‘기대하는 한국의 미래모습’을 묻자 응답자의 37.9%는 1순위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꼽았다(김석호 외, 2021). 이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8.6%),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18.1%)를 그 다음 순위로 꼽았다(표2 참조).

<표 2> 기대하는 한국의 미래 모습 (2,000명)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37.9%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28.6%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	18.1%
국방력이 강한 나라	7.7%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 되는 나라	7.1%
기타	0.5%

(출처: 김석호 외, 2021)

여전히 경제성장이 중요한 가치로 나타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그룹의 특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김석호 외(2021)는 4가지 고유가치를 사회(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 경제(안정적인 경제성장), 환경(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 국제공헌(글로벌 과제해결을 위한 기여와 국제협력) 등으로 정의한 뒤, 가치별로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분석했다.

예를 들면 경제적 가치인 ‘안정적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역동성과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가치인 포용력, 신뢰, 사회안전망이나 환경적 가치인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처능력 등은 덜 중요하다고 간주했다. 반면, 환경적 가치인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환경오염, 에너지 전환노력, 폐기물 재활용, 기후변화 대처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경제적 가치는 덜 중요하게 여겼다. 경제성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는 “경제중심의 사회발전과 환경중심의 사회발전을 지지하는 집단 간의 가치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김석호 외, 2021:274).

이러한 가치관의 대립은 같은 곳에서 수행한 전문가 조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제, 사회, 환경, 국제관계 분야 전문가 138명 중에서 환경보존,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처능력 등 환경가치를 중시한 전문가일수록 경제적 가치에 가중치를 적게 주었다. 반대로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환경적 가치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다. 경제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전문가들은 사회적 포용력, 사회적 신뢰, 사회안전망, 구성원들의 건강, 정치사회 참여 보장 등 사회적 가치에도 적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올해 나온 또 다른 미래 인식 관련한 설문조사를 살펴보자. 한국행정학회(2021)가 조사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국민인식’에서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을 대립항으로 놓고 응답자의 의견을 물었다. ‘자연보호와 녹지보전을 위해 경제개발을 늦추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진술과 ‘경제개발에 필요하면 자연훼손과 녹지축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진술 중에서 응답자의 50.8%는 전자에 동의했다. 후자에 동의한 응답자는 13.8%에 불과했다.

국민의 환경보존에 대한 지지는 꽤 높는데, 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경제성장주의자와 환경보존주의자 간의 첨예한 갈등이 감지된다. 이 보고서는 ‘30년 후 희망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질문으로 응답자를 7가지 미래 지지그룹으로 나누었다. 정치선진국, 경제대국, 복지국가, 사회문화강국, 친환경국가, 과학기술강국, 남북통일 평화국가 등이 7가지 미래상이다. 전국 1,000명의 응답자에게 지지하는 미래상을 물어본 결과, 복지국가(26.1%), 과학기술강국(17.8%), 정치선진국(14.2%), 남북통일 평화국가(14.1%), 경제대국(12.3%), 친환경국가(10.3%), 사회문화강국(5.2%) 순으로 나타났다.

7가지 미래상 중에 친환경국가를 선택한 응답자 중 75.8%가 자연보호와 녹지보전을 위해 경제개발을 늦추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이 의견에 가장 적게 동의한 응답자들은 경제대국을 원하는 그룹이었다. 경제대국 지지자와 친환경 지지자가 대립하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2.3. 효율성과 형평성

제한된 자원으로부터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려는 효율성은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였다. 경제적 성장이 지속되려면 성장을 일궈내는 인재가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 국가별 경쟁의 시대에 경제성장을 혁신적으로 일으킬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려면 효율적이고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가 필요하다. 성적을 기준으로 1등과 꼴찌를 정하고 그중 1등은 따로 모아 사회적 난제, 혁신의 과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난제와 혁신은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보상을 높게 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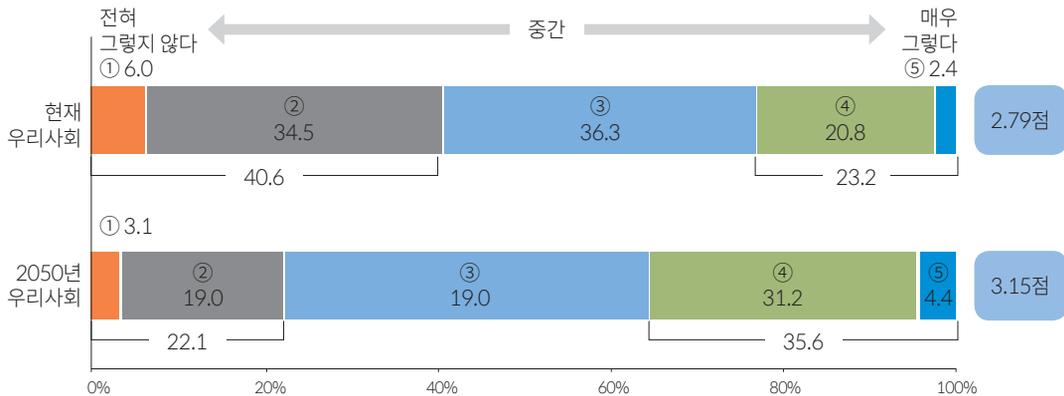
효율성 중시와 능력주의 문화에서 국민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소득에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행정학회 조사(2021)에서 ‘소득은 노력에 대한 차이는 두어야 하나 능력에 따른 차이는 없어야 한다’는 진술문과 ‘소득은 노력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른 차등도 두어야 한다’는 대립되는 진술문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51.1%가 후자를 선택했다. 전자를 선택한 응답자는 19.5%에 불과했다. 2014년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 후자를 선택한 비율은 47.5%였다(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14). 7년이 지난 지금,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3.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시민들은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더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하는 능력주의는 개인들이 성과를 실현할 기회를 동등하게 갖지 못할 때 불평등하게 작동한다. 각 개인의 경제적, 환경적 조건에 맞게 출발선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효율성과 능력주의를 내세워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효율성에 기반한 능력주의는 개인들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매우 협소하게 결과만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보상을 논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우명숙, 남은영, 2021). 게다가 개인이 노력한 결과로 나타난 성공은 때로 운이나 우연,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개인의 능력으로만 성공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우리사회 시민들은 능력주의의 순기능이 발휘될 정도로 사회가 공정하다고 평가할까.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시민들은 교육 받을 기회(64.7%)나 복지 혜택(47.1%)은 공정한 편이라고 응답했다(김석호 외, 2021). 그러나 일자리를 얻을 기회, 계층 이동의 기회,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기회, 법의 적용 및 집행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사회의 차별을 묻는 질문의 답변에서 일부 드러난다. 응답자들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차별, 학력으로 인한 차별, 성별로 인한 차별, 나이로 인한 차별, 외모로 인한 차별 등에서 우리사회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김석호 외, 2021).

민보경 외(2020)에서도 경제적 부의 분배는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40.6%, 공정하다는 의견이 23.2%여서 시민들은 분배의 측면에서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그림1 참조). 그러나 30년 뒤의 미래에는 응답자의 35.6%가 공정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1%였다. 점차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은 확인한 셈이다.

[그림 1] 경제적 부의 분배에서 공정성 평가 및 전망 (단위: %)



(출처: 민보경 외, 2020)

효율성이나 능력주의에 기반한 경제적 성장도 필요하지만,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일궈낸 사회들은 “형평성과 공정한 분배, 사회통합, 책임있는 자원의 이용 및 환경보존 문제들을 고려하기 시작한다”(김석호 외, 2021).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최대한의 효율성을 끌어내 잉여가 발생하면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 보상한다는 것이 기존의 사회운영 원리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개인, 제한적인 기회만 가져던 개인,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이 좋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개인들이 발생하면서 이들을 위한 잉여의 분배도 사회통합의 이유로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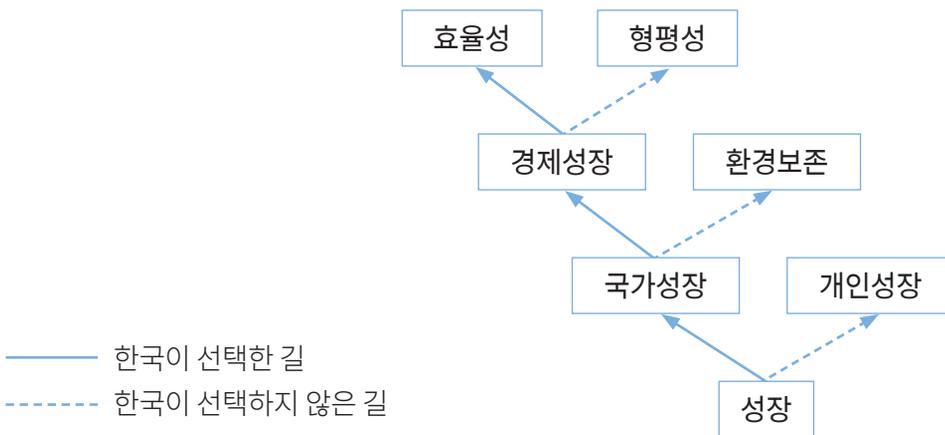
Ⅲ.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와 전망

위에서 살펴본대로 여러 갈등의 중심에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자리잡고 있다(그림2 참조). 성장이라는 단어에 우리사회는 늘 ‘경제’를 붙여왔는데, 이제는 다른 단어를 붙여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다. 과거에 다른 단어를 붙여보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동반성장, 포용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성장 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경제성장이라는 프레임에서 작동되었다. 어떤 성장이든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성장은 곧 경제성장을 의미했고, 경제성장은 국가의 성장과 동일시되었다. 사리사욕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이 선(善)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문화에서 여전히 우리사회 시민들은 경제가 성장하면 모두 부유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림 2] 한국사회가 선택한 길과 선택하지 않은 길



(출처: 저자 작성)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우리사회가 선택하지 않은 길(그림2의 점선 부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보다는 환경보존, 국가성장보다는 개인성장, 효율성과 능력주의보다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그렇다.

민보경 외(2020:147~148)는 10대와 20대를 미래세대로 간주하고 이들과 30대 이상 세대의 가치관을 비교했다. 이 분석에 기초해 민보경 외(2020)는 미래세대가 “개인주의적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집단주의 경향도 확인”했다며 이들이 집단주의적 태도를 보인다고 했을 때 그 집단은 전통적인 “국가 차원의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 속한 특정 공동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중추가 될 미래세대의 마음에는 국가보다는 개인들의 작은 공동체가 자리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래세대는 향후 국가주도의 성장보다는 개인 주도, 작은 공동체 주도의 성장과 발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김석호 외(2021:288)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점차 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평과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통합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논의를 종합하면 개인성장, 환경보존, 사회통합을 위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적 비전과 실천의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IV. 우직지계(迂直之計)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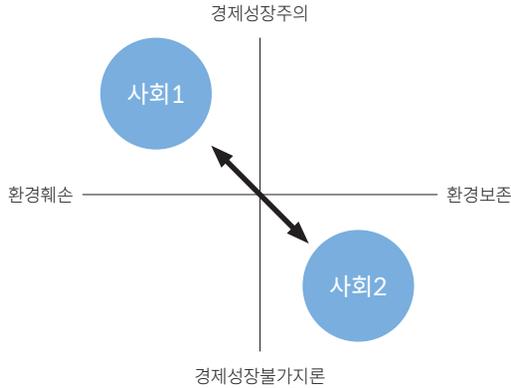
우리사회가 마주하는 갈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사회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그림3과 그림4 참조).

그림3은 우리사회의 지배담론인 경제성장주의가 ‘경제성장 불가지론’과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석호 외(2021:288)는 도넛 경제학의 저자 케이트 레이워스(2018)를 인용하면서 경제성장 불가지론은 “경제성장이 사회통합이나 환경보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레이워스(2018)는 사회적 공평함, 정치적 발언권, 소득과 일자리, 교육, 보건, 성평등, 평화와 정의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를 다지고, 기후변화, 대기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 해양 산성화 등 생태적 한계를 막는 것이 진정한 번영이자 발전이라고 정의한다. 레이워스(2018)는 이런 번영과 발전을 일구는 데에 경제적 성장이 긍정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성장에 집착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그림3에서 사회1은 지난 과거와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자연환경을 희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2는 현재 우리사회 시민들의 일부가 요구하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는 미래사회의 모습이다. 이 미래는 환경보존과 경제성장불가지론이 짝을 이루고 있다. 앞서 설문조사 내용으로 국민의 의견을 살펴보았듯,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늦춰도 된다” “경제성장이 둔화되어도 환경보호가 우선이다”는 의견을 반영하면 사회2라는 새로운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민보경 외(2020)는 한국인의 미래가치관 조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68.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내가 낸 돈이 환경오염 방지에 사용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소득의 일부를 내놓을 것이다’는 의견에도 응답자의 54.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림 3]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갈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미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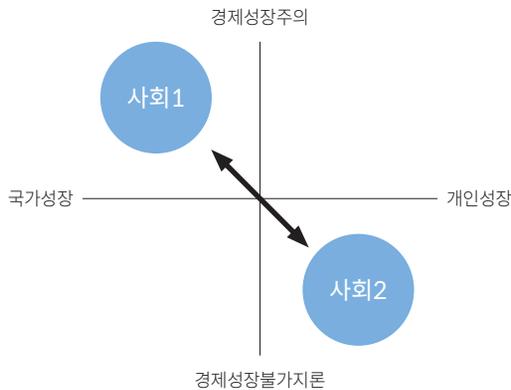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국가성장과 개인성장을 대립시키고 4분면을 그려보면 그림4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도 사회1은 과거와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사회2는 우리사회의 일부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미래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앞서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소득이 적고 출세하지 못해도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겠다”는 태도나 “개개인의 미래기획과 추진을 돕는 공동체의 형성”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는 사회2의 모습을 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김현곤(2021)은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관점, 사회 구성원의 관점에서 국가발전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글에서 국가가 각 개인의 최우선 인생아젠다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새롭게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림 4] 국가성장과 개인성장의 갈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미래 공간



(출처: 저자 작성)

손자병법에 우직지계(迂直之計)라는 전략이 있다. 곧장 가는 것보다 우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경제학자 송병락은 가파른 직선의 길을 오르는 것보다 구불구불하지만 완만한 곡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효할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거나, 막다른 골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우직지계를 써야 할 적기라고 말한다.⁴⁾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노력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단기간에 점령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동반성장,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이나 그린뉴딜 등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고 해도 방향은 앞서 언급한 대립하는 가치의 통합이었고, 선호하는 미래로 가는 지름길의 제시였다. 만약 역대 정부의 이런 융합적 시도와 지름길 전략이 성공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약당이라는 오명은 피했을지 모른다(기후변화대응지수 61개국 중 58위, OECD 국가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등).⁵⁾

그림5에서 제시하듯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장기적 비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경제성장과 개인성장이 모두 함께 가는 장기(선호)미래이다. 그러나 사회1에서 당장 장기미래로 가는 지름길은 어려워 보인다. 그 길을 택했던 많은 시도와 실패가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장기미래를 지향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기존에 추구했던 가치와는 다르지만 국민이 바라는 길을 통과해 장기미래로 향하는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불구불한 길이더라도 중국에는 장기미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성장주의와 경쟁에 지친 수많은 개인의 심신을 달래고 파괴된 생태계를 복구하며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축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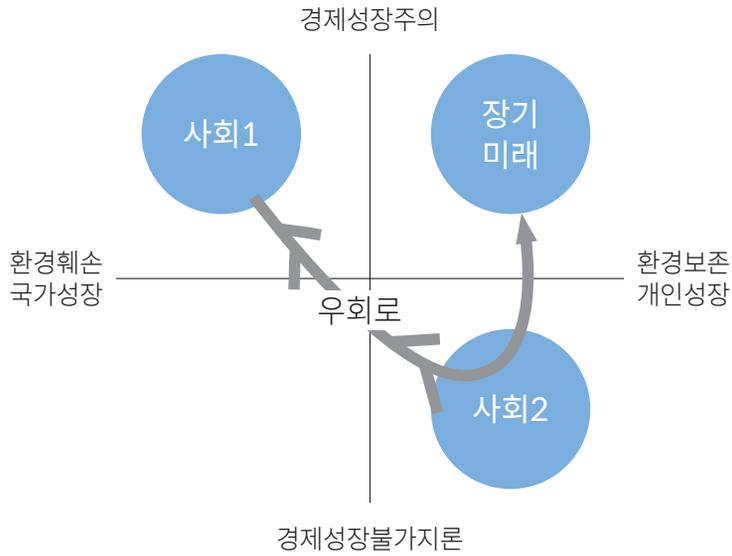
적어도 이런 우회 전략은 사회2라는, 우리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제시한다. 앞서 설문조사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일부 국민은(또는 다수가) 사회2와 같은 공간을 원하고 있음을 감지한 것이 그 증거들이다. 그런데도 사회1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2라는 새로운 공간의 열망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1의 열망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같은 논리로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2라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데에도 이롭지 않다.

사회1과 사회2의 건강한 대립과 상호작용이 사실은 더욱 중요한데, 이런 건강한 대립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려면 사회2가 등장해야 하고, 사회2로 가는 길이 놓여야 한다. 사회1과 사회2의 대등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거나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에 대한 대안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에둘러가다보면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목적지 자체를 다시 성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다.

4) 송병락. (2012년7월14일자). 直보다 빠른 迂...때론 간접 공격이 효과적. Weekly Biz.

5) 이승준. (2020년8월30일자). [기후위기] 한국이 기후약당이라 불리는 이유. 한겨레21.

[그림 5] 장기(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출처: 저자 작성)

참고문헌

- 김석호 외. (2021). 국가사회 발전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체계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현근. (2021).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0호. 국회미래연구원.
- 레이워스, 케이트. (2018). 도넛 경제학. 홍기빈 옮김. 학고재.
- 민보경 외. (202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외. (2019).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0).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호. 국회미래연구원.
- 우명숙, 남은영. (2021).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연구, 64(1): 201-244.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14). 2014 대한민국 미래비전 국민대토론회.
-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학회 대한민국 미래100년 특별위원회. (2021).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삶의질 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3.4
14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3.18
15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4.1
16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4.15
17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4.29
18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5.13
19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5.27
2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언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1.6.10
21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2021.6.24

· 이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www.nafi.re.kr (미래연구-미래보고서-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